



최 병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초저출산에 대처하는 국가적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나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근래에 합계출산율이 1.2 정도에 머무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인구적 요인 때문에 저성장의 늪에 빠질지도 모른다. 5천만명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12%로써 유럽 국가에 비해 아직까지는 젊으나, 2060년에 40%에 도달하여 일본과 더불어 최고령국가로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도 합계출산율이 1.4까지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에 따르고 있다. 만약 합계출산율이 1.2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초고령사회 리스크에 빠질 것이고, 취약한 인구경쟁력 때문에 한국의 국제경쟁력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경제성장이 최우선의 국가목표였던 개발연대를 지나면서, 출산율의 하락과 고령화 문제는 간과되고 있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처한 사회복지 시스템은 준비되지 못했다. 국민연금제도는 늦게 도입되었고, 노인의 질병과 돌봄에 대

처한 시스템도 늦게 시작되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고령화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복지지출을 해왔다. 현재의 사회보장제도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에 사회복지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2012년 10%에서 2060년에 29%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60년의 고령화율 40%에 비하면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여전히 낮을 것이다.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가져오는 요인은 평균수명의 빠른 연장과 출산율의 하락에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은 가장 빠르게 기대수명이 연장된 국가이고 이미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기대수명을 앞질렀다. 출산율의 하락 역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였다. 출산율이 저하하는 배경은 매우 복잡하지만, 여성과 가족의 변화가 깊게 내재되어 있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1990년에 30%대였으나 2010년에 80%까지 다달았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취업이 활성화되면서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

혼을 하더라도 늦게 하고 아이도 늦게 낳음으로써 출산률이 하락하였다. 40~44세 여성 중 결혼을 한번도 하지 않은 여성은 최근 10%대에 이르렀다.

정부는 출산을 저하에 대한 대책으로 보육정책을 강화하여 2013년부터 모든 아이에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였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 보육수당(현금)을 지원했다.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1년간 육아 휴직기간 중 월급의 40%를 지원하고, 출산 및 육아 휴직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크레딧을 인정하고, 보육비용에 대해 조세를 감면하였다. 하지만 보육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상당히 진행된 유럽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침체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유럽의 젊은 세대들은 자신이 노인 세대가 되었을 때에 현세대 노인이 누리는 혜택을 누리질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끼면서 세대 간 연대가 흔들리고 있다. 빈부격차가 벌어지면서 계층 간의 갈등은 심해지고 있고 주변 국가들에서 유입되는 이민자들로 인한 재정 부담과 사회 문제들이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경제가 튼튼한 소수 국가를 제외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고, 노후를 위해 맡긴 돈이 제대로 관리될는지 금융 시스템을 불안하게 쳐다보기도 한다. 유럽식 복지국가모델이 현재의 모습으로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는 데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고 실업과 마약 등 사회적 난제에 대한 국가의 대처 능력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이 복지를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 보육료 지원과 보육 인프라에 의해 유지되어 왔던 국가 보육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시간 보육' 시스템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심화되는 노인부양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오래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줌으로써 연금과 의료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역공동체로서 교회의 역할이 강조되어 교회 내 건강한 노인이 장애 노인을 수발함으로써 건강한 노인은 일자리를 얻고 장애 노인은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하는 프로젝트가 독일의 작센주에서 이미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경험한 유럽 국가와 현재 우리나라와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는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교류하면서 초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한국식의 고유한 발전 모델을 모색할 때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적 연대를 구축하는 일이 절실한 시대적 과제이다.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미래 노동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성과 노인 등 잠재적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어린이와 청년의 잠재력과 역량을 제고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통일은 다른 하나의 대안이고 숙제이다. 남북한 통합 인구는 7400만명이 되고, 북한의 젊은 노동력 인구와 더불어 높은 출산력이 유지되면 노동력 인구가 늘어나고 고령화 문제는 훨씬 완화될 것이다. 더구나 통일한국이 갖게 될 경제적인 기회와 새로운 사회적 활력이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여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민**